

5·18 진상규명위 출범 성과...헌법 전문 수록 무산 아쉬움

기념식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5·18 약속 얼마나 지켜졌나

옛 전남도청 복원 2024년 마무리
5·18 관련 3법 국회 통과 힘써
임 행진곡 제창은 관련법 계류 중
열사 4명 추모사업 추가조치 없어
2개 완료·6개 진행중·1개 폐기 등
주요 약속 11가지 중 '절반의 성공'

■ 문재인 대통령 5·18기념식에서 밝힌 약속

| | |
|-----------------------------|----------|
| 37주년 2017년 5월 18일 | 현황 |
|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 진행중 |
| 5·18관련 자료 폐기 및 역사왜곡 방지 | 진행중 |
| 전남도청 복원 | 진행중 |
|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 폐기 |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관련법 계류중 |
| 4명의 열사 추모 사업 희망 | 추가 조치 없음 |
| 38주년 2018년 5월 18일 (국무총리 대리) | 현황 |
| 5·18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구성 | 완료 |
| 5·18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기록물 보완 | 진행중 |
| 39주년 2019년 5월 19일 | 현황 |
| 진상규명위원회 조속한 출범 약속 | 완료 |
| 40주년 2020년 5월 18일 | 현황 |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지원 | 진행중 |
| 다양한 희생자들 명예회복 | 추가 조치 없음 |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5·18 진상규명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념식 참석 때마다 5·18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5·18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도록 호소하는 한편, 오월 정신과 전남도청 앞 광장을 기억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해 밝힌 약속들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5·18 37주년)부터 2020년까지 열린 4차례 기념식 중 한 차례를 빼고 모두 참석했다. 임기 마지막인 올해 기념식까지 참석할 경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으로 남는다.

문 대통령이 기념식을 통해 밝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약속은 ▲진상규명(월가사적, 암매장, 성폭력, 발포 진상·책임자 규명) ▲5·18 자료 폐기·역사 왜곡 방지 ▲옛 전남도청 복원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지원 ▲4명의 열사 추모 사업 희망 ▲경찰관, 군인, 해직기자 등 다양한 희생자 명예회복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크게 11개로 꼽힌다.

이들 공약 중 2개는 완료, 6개는 현재진행형이다. 1개는 사실상 백지화됐고 2개는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게 5월 단체들 분석이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38주년과 39주년 기념식에서 약속한 ▲5·18진상규명위원회 결성(38주년) ▲진상규명위원회 출범(39주년) 등은 지켜졌다.

37주년 기념식 때 언급한 이후 4년 내내 강조했던 진상규명의 경우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2020~2023년) 등을 고려하면 다음 정부까지 이



“미안마 민주화 지지” 오월 주먹밥 나눠요 2일 오후 (사)오월어머니집 회원들이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미안마 지지 대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고 있다. 오는 23일에도 전일빌딩 245에서 열리는 '미안마를 위한 오월행동'에 참가하는 미안마 단체들에게도 주먹밥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월어머니집 제공>

어질 것으로 보인다.

옛 전남도청 복원 약속도 2024년으로 정해진 복원 기간에 따라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문 대통령이 40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37주년 기념사에서 밝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사실상 폐기됐다.

문 대통령은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2년 뒤인 39주년 기념식에 참석, “헌

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37주년 기념식에서 “5·18관련 자료 폐기 및 역사왜곡을 막겠다”고 했지만 추가 기록물 보관장소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내 수장고의 90%가 사용중인 상태다.

문 대통령이 37주년 기념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은 지난해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것으로 이어져 계류중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인 지난 37주년 기념사에서 “함께 기리고 싶다”며 언급했던 박관현·표정두·조성만·박래전 등 네 명의 민주 열사들에 대한 추모 사업 등은 미진하다. 기념식 이후 빈 캠퍼스에 방치되던 표정두 열사 비석이 지난 2019년 5·18기념공원으로 옮겨진 게 고작이다.

대통령이 40주년을 맞아 이준규 총경 등 5·18 민주화운동으로 징계받았던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가 이뤄진 점을 들어 “경찰관뿐만 아니라 군인, 해직 기자 같은 다양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는 약속은 눈에 띄는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병원 채용 취소 처분 '엇갈린 판결'

'아빠 찬스' 아들 합격 취소 적법...여친은 합격 인정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전남대병원 남친 아빠 찬스'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합격이 취소됐던 여성이 복직하게 됐다. 다만, 법원은 '아빠 찬스' 의혹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아들에 대한 병원측의 임용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송인경)는 A씨와 B씨 등 2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B씨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병원 관계자의 아들, B씨는 A씨의 여자친구로,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 병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병원측이 국정감사 이후 이어진 '교육부의 채용비리 특별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4월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을 내린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들은 “병원 관계자인 아버지나 남자친구로부터 영어 문제집이 무엇인지 전달받은 사실도 없고 실력으로 합격한 것으로, 부정행위의 이익 등으로 불공정하게 선발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경은 교육부의 A·B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고 재판부에는 제출된 영어문제집이나 영어시험 기출문제를 제공받았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전남대병원의 직원임용시험세칙(24조) 상 '기타 부정행위'의 의미에 주목했다. 병원 시행세칙상 '기타 부정행위'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A씨의 경우 부정행위로 임용시험에 합격했다'고 판단했다.

병원 관계자인 아버지가 아들의 임용시험 응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시험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응시한 경우 시험위원으로 제척한다'는 직원임용시험세칙(11조2)을 위반한 '부정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아버지의 부정행위를 아들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어 '기타 부정행위'의 의미를 고려하면 부정행위로 합격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에 대해서는 '정당한 근거 없이 이뤄진 임용취소처분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B씨와 A씨 아버지가 친족 관계가 아니라 시험위원으로 참여한 '기타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A씨 여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고객 자동차 휠 고의 훼손 후 교체 권유 광주 타이어뱅크 상무점 전 업주 구속

피해 고소·진정 60여건 달해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를 받은 타이어 수리매장 <광주일보 2020년 10월 28일 6면> 전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재물손괴와 사기 등의 혐의로 타이어뱅크 상무점 전 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장을 찾아온 고객들을 상대로 차량 휠을 고의로 망가뜨린 뒤 교체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범행 1건만 인정했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

사연구원 분석 등을 통해 관련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범행을 파악했다.

이들 통해 A씨 등이 벌어들인 부당 수익은 입증된 것만 5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며,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고소와 진정 60여 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들어 A씨 이외에도 B씨 등 직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휠 훼손 장면이 녹화된 범행 이외의 휠 훼손 의혹과 조직적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사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 부지

- ▶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156평, 일반상업지역
- ▶ 지하1층 지상9층, 47㎡, 64호실
- ▶ 임대/분양 100% 최고 장소
- ▶ PF 28억 가능, 허가 득
- ▶ 매매 - 협의

월세660만원 고정 수입

- ▶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 ▶ 6층중 4층 전체, 240평
- ▶ 메리트증권회사 임대 중
- ▶ 3면이 바다 전경, 뷰 좋음
- ▶ 용자 6억8000만원 있음
- ▶ 회사사정상 급매, 15억 →13억

거문도, 싹땅

-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 ▶ 대지 50 ~ 400평씩 매매
- ▶ 펜션, 주택, 별장부지
- ▶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 ▶ 근접땅 경매로 50만원 낙찰
- ▶ 급매 - 평당 30만원씩

제일오피스텔

-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 20층 중 8층, 코너, 전망 좋음
- ▶ 계 108㎡, 분양 67㎡, 사무실 전용
- ▶ 즉시 입주 가, 주차 2대 무료
- ▶ 임대, 보1천에 월50만 가능
- ▶ 매매 - 1억1000만원(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